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선동**

#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8. 10. 11(목)	담당자	강태용 비서관 (010-4925-4509)
문 의	784-8971~3		박필동 보좌관

## 정책금융 성과 왜곡, 기업 분식회계와 뭉가 다룬가

- 단순 피보험자 통계를 정책자금 지원에 따른 5,349명 고용 증가로 침소봉대
- 2017년 연말 집중 대출 이후 2017년 매출액 증가분을 정책성으로 포장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이 정책금융 성과를 국회로 제출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매출액 실적을 왜곡한 통계로 허위보고 하였다고 지적하였다.
- 금융위와 한국산업은행은 2017년 추경사업으로 「4차산업혁명 파트너 자금」 예산 800억원을 편성받아 2017년 8월부터 2018년 1월까지 4차산업 관련 기업 271개사에 2조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한 바 있다.
- 2017년 추경예산안이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급조되면서 부실집행의 우려가 있자, 부대의견으로 정책자금 지원실적과 성과 등 운용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안전장치를 두었다.
- 이에 따라 2018년 8월 금융위와 산은은 성과보고서 9면 중 3면을 할애하여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271개 기업의 일자리가 5,349명 증가하였고, 2017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1.9%가 늘어났다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 그러나, 금융위와 산은이 제시한 일자리 증가 내역은 정책자금을 받아 채용된 특정인원이 아니라 ‘매달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 중인 자’를 의미하는 한국고용정보원 피보험자수 단순 증가 비율이었다.

- 즉, 기업의 전체 영업활동에서 변화된 종업원 증감 통계를 정책자금 집행의 성과로 보고한 것이다.
- 고용노동부도 ‘신규 자금 유입 후 종업원의 증가가 고용증가로 해석할 수 있는지는 해당 기업의 내부사정과 외부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단할 수 없다’고 국회에 답변하고 있다.
-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271개 기업의 세부 지원내역 자료를 보면 일자리 성과 왜곡이 더욱 분명해진다.
- 지원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 종업원 숫자가 증가한 회사는 158개(58.3%), 감소 회사 95개(35.1%), 변동 없음 회사 18개(6.6%)로 나타났다.
- 그러나 금융위와 산은이 제출한 성과보고서 7페이지에는 산업은행이 영업점을 통해 전수조사를 한 결과, 지원기업 271개 중 265개사(97.8%)가 신규채용을 실시하였다고 적시되어 있다.
- 즉, 2조39억원의 정책자금이 투입되었으나 10개 기업 중 6개 기업에서만 일자리 증가가 있었고, 기업 10개 중 4개는 오히려 일자리가 감소했거나 변동이 없었는데 금융위와 산은은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정책자금을 받아 신규채용을 실시하였다는 보고를 한 것이다.

<표 1> 4차산업혁명 파트너 자금 수혜기업별 종업원수 증감 현황

구분	지원 회사수	비율	지원금액 (억원)	종업원수 증감(명)			
				17.6월말(A)	18.6월말(B)	증감(B-A)	증감비율
전체	271	100%	20,039	90,315	95,664	5,349	5.9%
종업원수 증가	158	58.3%	14,071	65,267	72,514	7,247	10.0%
종업원수 감소	95	35.1%	5,323	24,587	22,547	-2,040	-9.0%
변동없음	18	6.6%	645	461	603	142	23.5%

자료 : 김선동의원실(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제출 자료 재분석)

\* 변동없음 : 종업원수 변동이 없거나, 창업 등으로 해당연도에 자료가 등록 되지 않은 경우

- 매출액 성과보고는 더 큰 왜곡이 있다. 금융위와 산은은 2017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2016년 대비 11.9%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 그러나, 「4차산업혁명 파트너 자금」 예산이 투입 시기는 최초 2017년 8월 17일을 시작으로 2018년 1월 4일이 마지막이다.
- 2017년 8월부터 10월말 지원 기업은 49개사(18%), 11월말부터 2018년 1월 4일 까지 지원기업은 222개사(82%)로 대부분 연말에 대출이 승인되었다.
- 즉, 정책자금 집행 성과와 연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2016년 대비 2017년 매출액 증가를 근거로 동 자금을 통해 기업성장을 지원했다는 허위보고를 한 것이다.
- 실제 개별기업의 매출액 변화를 살펴보면 175개사는 증가한 반면, 84개 회사는 4,230억원을 지원받았음에도 매출액이 7.5%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4차산업혁명 파트너 자금 수혜기업별 매출액 증감 현황

구분	기업수	비율	지원금액	매출액 증감(억원)		
				'16년말	'17년말	증감율
전체	271	100%	20,040	497,909	556,012	11.7%
매출액 증가	175	64.6%	15,186	391,277	450,079	15.0%
매출액 감소	84	31.0%	4,230	106,632	98,656	-7.5%
변동없음	12	4.4%	624	NA	7,277	NA

자료 : 김선동의원실(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제출 자료 재분석)

\* 변동없음 : 매출액 변동이 없거나, 창업 등으로 해당연도에 자료가 등록 되지 않은 경우

- 김선동의원은 “관련 없는 통계자료를 근거로 정책자금 집행 성과로 왜곡하는 것은 불법적인 분식회계와 다를 바 없다”며, “산업은행 영업점이나 외부 인사를 활용한 정확한 전수조사를 통해 정책자금 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성과평가체계를 재점검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참고 1] 4차 산업혁명 파트너 자금 운용 현황 보고서 중 지원효과  
(2018. 8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

<표지>

## 4차 산업혁명 파트너 자금 운용 현황

2018. 8.

금융위원회

KOBRI1204702000

<6페이지>

### IV. 지원효과

- ◆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에 자금을 공급하여 자금이용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역량 강화, 일자리 증가, 기업성장 등에 기여
- ①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및 기반기술 부문에 집중 지원(95.2%)
- ② 일자리 창출 ▷ '17.6월말 대비 '18.6월말 5,349명 증가
- ③ 매출액 및 이익 ▷ '16년 대비 '17년 매출 및 수익성 증가

#### 1 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역량 강화

##### □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중심으로 자금공급

- 12대 신산업(시스템산업 3,923억원, 소재부품 3,533억원 등) 및 신성장 품목(화학·신소재 2,980억원, 첨단제조 1,891억원 등)에 집중 지원

구분 (억원)	12대 신산업			신성장품목			기타		합계	
	시스템 산업	소재 부품	핵심 신산업	첨단 제조	화학· 신소재	건강· 친단	에너지	기타		
금액	3,923	3,533	392	1,891	2,980	1,756	1,163	2,831	1,569	20,038

##### □ 4차 산업혁명 관련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동반 지원

- 대기업이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사업 추진시, 해당 사업에 납품하는 우량 중소 협력사에 대해서도 동시 지원

##### ※ 대·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 동반 지원 사례

- '17.11월 '4차 산업혁명 파트너 자금'을 활용하여 대기업 8사의 '대용량 데이터 고속전송망' 확충 사업에 지원(시설자금 500억원)
- 동 사업에 참여(납품)하는 우량 중소 협력업체를 동 대기업으로부터 추천 받아 자금 지원(운영자금 40억원)

- 6 -

KOBRI1204702000

<7페이지>

#### 2 일자리 창출 측면

##### □ (전제) '18.6월말 지원기업(271개사)의 종업원수는 '17.6월말 대비 5,349명 증가'하여 5.9% 증가 (한국고용정보원 피보컬서수 기준)

\* 종업원수(명) : ('17.6월) 90,315 → ('17월) 95,222 → ('18.6월) 95,664

##### ※ '17년 추정 당시 예상 고용효과

- 2조원 규모의 파트너 자금 조성 및 집행 시 6,000명 고용 증가 예상
- \* 약 6,000명 = 운용규모 2조원 × 고용유발계수 10억원당 3명 (KDI, 「금융의 일자리 창출효과 계량화 모형 구축(10년)」)

##### ○ 지원기업 271개사 중 97.8%인 265개사가 신규채용 실시

\* 신규채용 실적은 산업은행 영업점 전수조사 기준

##### □ (부문별) 중견기업, 핵심분야, 제조업 중심으로 일자리 증가

- (기업규모) 중소기업 대비 기업규모가 크고 자금공급이 많은 중견기업에서 3,645명의 고용 증가
- (지원분야) 파트너 자금의 95.2%가 공급된 핵심분야 및 기반 기술 부문(지원분야①)에 고용 증가가 집중(5,271명)
- (업종별) 제조업 부문에서 3,675명 증가

기업규모	'17.6월말	'18.6월말	증가
중소기업	80,000	82,000	2,000
중견기업	10,000	13,645	3,645
대기업	10,000	10,000	0

지원분야	'17.6월말	'18.6월말	증가
핵심분야	10,000	15,271	5,271
기반기술	10,000	10,000	0
기타	10,000	10,000	0

업종	'17.6월말	'18.6월말	증가
제조업	10,000	13,675	3,675
서비스업	10,000	10,000	0
기타	10,000	10,000	0

\* 지원분야 : ①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분야 및 기반기술, ②전통산업 고도화, 산업간 융복합 등 4차 산업혁명 확산, ③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대투자

- 7 -

KOBRI1204702000

<8페이지>

#### 3 기업성장 지원 측면

##### □ (전제) 중견·중소기업의 매출과 수익성은 전반적으로 증대

##### ○ (매출액) 자금이용기업의 '17년 매출액이 전년대비 11.9% 증가

\* 매출규모가 큰 계열대기업 실적은 집계에서 제외

##### ○ (수익성) 자금이용 중견·중소기업의 '17년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5.1%, '17년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0.7% 증가

##### □ (기업규모별) 중견기업은 매출과 수익성 모두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매출은 증가하고 수익성은 감소

##### ○ (중견기업) '17년 매출액은 '16년 대비 38,441억원, 영업이익·당기순이익은 4,304억원, 1,214억원 증가

##### ○ (중소기업) '17년 매출액은 '16년 대비 6,397억원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당기순이익은 211억원, 1,095억원 감소

구분	'16년	'17년	증가
매출액	38,441	76,882	38,441
영업이익	4,304	8,608	4,304
당기순이익	1,214	2,428	1,214

구분	'16년	'17년	증가
매출액	6,397	12,794	6,397
영업이익	211	422	211
당기순이익	1,095	2,190	1,095

- 8 -

KOBRI1204702000

[참고 2]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피보험자 해석 관련 국회 답변 자료

<p><b>김선동 의원(20180823)</b></p> <p><b>1. 180823_고용노동부 업무 관련-1</b></p> <p>1.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조사 분석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피보험자(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의미 및 등록 요건</p> <p>□ 고용보험 피보험자 통계 의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매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중인 자</u></li> <li>- 고용보험에 취득된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와 임의가입 자영업자</li> </ul> <p>□ 고용보험 피보험자 등록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보험법상 당연 적용 근로자(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자 등)와 임의 적용 대상자(별정직·임기제공무원, 외국인근로자 일부, 자영업자)는 고용보험법 제15조 등 사업주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당연) 또는 고용보험 가입신청(임의)을 통해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됨.</li> </ul> <p>※ 참조: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고용보험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실업급여만 적용제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li> <li>2.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는 적용</li> <li>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별정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 가능</li> <li>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li> <li>5. 외국인근로자(단, 일부 체류자격에 따라 당연, 임의 적용함)</li> <li>6.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li> </ol>	<p>2. 종업원 피보험자 숫자 증감 변화와 관련하여, 예컨대 2017년 100명이었던 A기업에 신규 자금이 유입되어 2018년 6월 기준 120명으로 종업원 숫자가 증가하였을 경우, 증가된 20명의 고용자가 신규 자금에 따른 고용증가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p> <p>□ 특정 기업에 신규 자금 유입 후 종업원의 증가가 고용증가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의 내부 사정과 외부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예시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음</p> <p>3. 2번 사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업원 숫자가 80명으로 감소하는 경우 신규자금에 따른 고용효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p> <p>□ 종업원의 감소에 대해서도 2번 사례와 마찬가지로 판단할 수 없음</p>
<p>담당부서 고용지원실업급여과</p>	<p>담당자 5급 양영석</p> <p>연락처 044-202-7370</p>